

설계사·택배 등 특고직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특수고용직〉

고용부, 관련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체적인 적용대상 대통령령 정해
9월 법안 제출, 연내 국회 통과 예정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는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2018년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근로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특고를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아왔다.

개정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

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킥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직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토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토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직할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서정 차관은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금값, 연일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국제 금용시장에서 금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본점에서 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마켓위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물 금은 온스당(31.1g) 0.9%(16.40달러) 오른 1809.90달러에 마감했다. /뉴시스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제한

금융위, 10일부터 6·17 대책 시행
전세대출 후 아파트 구매땀 회수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또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새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 규제는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 대출 신청을 한 차주에 한해 적용된다.

◆투기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아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단, 10일 이전 분양권과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한다.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할 경우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전세보증대출을 신청하고 받은 뒤 규

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회수는 10일 이후 대출 계약시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추가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위, 잔금 대출 관련 보완책 마련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우선 시행하되,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대출 규제에 한해 보완책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차주에 한해 중도금은 기존과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잔금대출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잔금 대출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양가의 60% 이내인 중도금 대출 범위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원 초과 30%), 투기과열지구에는 40%(9억원 초과 2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대출가능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5G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

방통위,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
SKT 233억, KT 154억, LG U+135억
사전승낙제 위반 125개 유통점 2.7억

5세대(5G) 이동통신 불법보조금과 관련,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700억~800억 규모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았다.

방통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기로 의결했다.

감경비율은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하게 45%로 책정됐다. 총 매출액 등에서 SK텔레콤 2.2%, KT 2%, LG유플러스 2.2%로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45% 감경을 적용했다.

각 통신사 별로 SK텔레콤이 233억원,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이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이나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이 초과지원금 지급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아니라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 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

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는 5G 초기 가입자 확대 필요성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해 예초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자 등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나인 기자 silkni@

두산-스카이레이크, 두산솔루스 매각 MOU 체결



매각 가격·조건 등 언급은 없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두산그룹이 전자 소재 계열사인 두산솔루스를 토종 사모투자펀드(P EF)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한다.

두산은 두산솔루스 매각과 관련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와 7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두산안팎에선 두산솔루스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은 그밖에 매각 가격이나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두산그룹은 전자·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두산솔루스 지분 전량을 스카이레이크에 매각하기 위해 협의해왔다.

두산솔루스는 전자·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

출 2030억원, 영업이익 380억원을 올린 알짜 회사다. 두산솔루스는 (주)두산(17%)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주요 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44%)들이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다. 매각가는 7000억원 정도로 거론된다.

두산그룹은 애초 스카이레이크와 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매각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산그룹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매각에 나섰으나 예비입찰이 흥행하지 못했고 이후 스카이레이크와 다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